

학살 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야만적인 침략과 학살, 점령으로 점철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게 '제2의 베트남'처럼 되고 있다.

학살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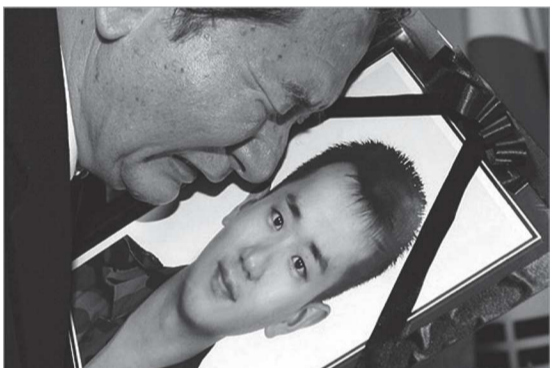
부시가 시작해 오바마가 잇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지금껏 아프가니스탄인 약 1백25만 명이 학살됐다. 또 미군 장병 전사자수도 거듭거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쟁광들은 이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여성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 테러 위협은 전쟁 전보다 여섯 곱절 이상(2006년 통계) 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점령에 반대하는 테러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미군과 나토군은 1백만 표가 넘는 부정표로 대통령이 된 뺏속까지 부패한 하미드 카르자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여성 인권으로 치자면 아프가니스탄은 점령 이후 성폭행 범죄율이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카르자이는 올초 남편이 부인을 합법적으로 성폭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려 했다.

그런데도 오바마는 집권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2만 1천 명을 증파하고 파키스탄으로 전쟁을 확대했다.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1만 명이 넘는 미군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동맹국들에 학살 전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중단돼야 하고 모든 점령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재파병

미국과 "혈맹"임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확대 파견하고 특전사로 구성된 군대 3백여 명을 재파병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파병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며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던 정부는 오바마 방한(11월 18~19일) 선물 보따리로 재파병을 내놓으려한다. 이미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한 국가에서는 철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철군한 뒤 다시 파병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두 명이 숨졌다.

그해 말 동의·다산 부대가 철수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온갖 거짓말로 재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11월 14일 반전 집회로 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동의 날

일시 : 2009년 11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도심(추후 공지)

주최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02-749-3536 / 02-2631-5027

재파병을 위한 거짓말

■ 재건을 위한 지원?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건 지원 명목으로 90억 달러(약 11조 원)를 받았지만, 아프가니스탄 인구 3천만 명 중 1천8백만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10명 중 6명이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하루 전쟁비용으로 1천만 달러(1백 20억 원)를 쓰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인 80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재건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그 돈들은 고스란히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정부 관료와 '재건' 기업들의 배나 불리게 될 것이다.

■ 지역재건팀(PRT)은 재건을 위한 비전투부대?

지역재건팀(PRT)은 2003년 부시 정부 시절 미군이 효율적인 전투를 치르려고 만든 전투부대 예하부대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은 연합합동기동부대-180 예하부대로 점령군의 군사 행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지역재건팀(PRT)을 "우리 전투병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던 것이다. 또, 지역재건팀(PRT)은 저항 세력을 소탕하려고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양성·훈련하고 있다. 재건이라는 모자를 씌워도 지역재건팀(PRT)은 점령군의 일부일 뿐이다.

■ 안전한 곳으로 파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지역재건팀(PRT)이 주둔하지 않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피사 주(州) 중 한 곳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중동 지역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국제안보개발위원회(ICOS)가 발행한 현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세 지역은 무장 저항군과의 교전으로 미군과 나토군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수도 카불 인근에 위치한 카피사 주는 바그람 미 공군기지와 가까워 탈레반이 카불 진입의 군사적 거점지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게다가 이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어느 지역을 결정하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한 전투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장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파병?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순위 43위로 밀려나서 되겠냐고 말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국가는 14개뿐이고, 대거 군대를 파병한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에서는 철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OECD 30개국 중 노동시간 1위, 형평성·환경·건강·주관적 생활 불만족도 5위인 나라다.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은 전쟁과 학살 지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반전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반전 집회와 11월 18~19일 오바마 방한 기간에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재파병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자.



파병의 대가를 또 치를 셈인가

- 2003년 11월, 이라크서 오무전기 직원 2명 차량 이동 중 습격당해 김만수·곽경해 씨 사망.
- 2004년 5월 31일, 이라크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 납치된 뒤 6월 22일 주검으로 발견.
- 2007년 2월, 아프가니스탄 미 공군 바그람 기지에서 윤장호 하사가 폭탄 테러로 사망.
- 2007년 7월, 한국인 23명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 두 명 숨짐.
- 2009년 3월, 예멘 고대 유적지 사밤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한국인 관광객 3명 사망.
- 2009년 6월, 예멘 북부 사다 지역에서 피랍된 한국인 숨진 채 발견됨.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함께해 주십시오

- 11·14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동의 날에 참가하십시오.
- 11월 18~19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아프가니스탄 점령·재파병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하십시오(시간·장소 추후 공지).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서명에 동참하십시오.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 항의 전화와 항의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청와대: 02-730-5800, webmaster@president.go.kr | 외교통상부: 02-2100-2114, web@mofat.go.kr | 미국대사관: 02-397-4114, EmbassySeoulPA@state.gov

